

■ **현장과 시각** ■

공연예술제가 살 길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1일 시작된 전주영화제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개막 3일 전 티켓의 60%가 팔렸고,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빠른 속도였다. 항상 전주를 찾는 지인은 '무작정 줄서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잘 나가'는 전주영화제를 접하니 광주국제영화제의 조라한 모습이 떠올랐다.

4월 초 통영국제음악제를 찾은 음악인 A씨.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주회 3개를 연속 관람, 몸은 피곤해도 행복했다며 광주에서도 이런 공연이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대표 문화행사는 광주비엔날레다. 디자인비엔날레도 열리고, 새로운 광주시립미술관도 개관하는 등 '미술콘텐츠'는 풍성하다.

반면, 공연쪽은 빈약하다.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의정부국제음악극 축제, 춘천국제인형극축제 등 지역의 '대표 문화이벤트' 역할을 하는 공연축제가 많지만 광주는 잠잠했다. 임방울극제는 전문인들의 '경연'이고, 정음성음악제는 대중성이 약하다.

그래서 2년 전 민간에서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를 개최했을 때 애호가들은 박수를 보냈다. 기획자들이 염두에 두지 못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공연예술제는 안은미 공연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했지만 '조직 문제'에서는 불협화음이 계속됐다.

기자는 지난 3월 공연예술제 총회에 참석했다가 먼저 열린 이사회 내용을 그대로 적은 회의록이 첨부된 총회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화 내용은 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다행히 총회에서 집행위원장이 사퇴, 해결책을 찾는 듯 보였지만 40여일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비상 사태'임에도 이사회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소집된 이사회는 특정 이사의 사퇴 문제로 취소됐다. 논의는 이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도 특정인이 결속한다는 이유로 하루가 급한 이사회를 취소하는 건 상식밖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시 고위층과 특정 이사와의 불협화음은 오랫동안 문화계에 떠돌고 있다. 예산을 내놓는 시 입장에선 결구려운 인사가 마땅할 것지만 지나친 간섭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 예술인들 역시 시비 지원 사업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지적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다. 하루 빨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게 급선무다. 프로그램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정관 개정 등 조직 문제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축제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다. 좋은 공연을 선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올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감동적인 공연 선물을 전해주길 바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野 “靑수석 추가 사퇴” 공세

민주, 대변인·외교안보 수석 등 고발키로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농지 불법취득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추가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야권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농지 매입관련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뒤 한때 다른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선에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대변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박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4명을 농지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상 영리행위 금지조항 위반 혐의와 고발키로

로 하는 등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원회의에서 "김병국 박승준 수석과 이봉화 차관, 이동관 대변인은 전부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걸려있어 우리 당에서 검찰에 고발할 생각"이라며 "부적격 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털어서 먼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 냄새가 나는 데 이런 참모와 끝까지 가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한다"며 "법이 안 된다는 걸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면 그건 독재"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문서인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 대변인이 신분을 악용해 언론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경질을 요구했고,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참모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언론사에 대한) 외압이라고 하는 데 인지상정으로 상식선에서 말한 것이지, 협박하고 압력을 넣고 이런 것은 아니다"면서 "(언론사에 문제 삼으려 했던 것이) 새로운 팩트가 아닌니 상식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中 “성화봉송 중국인 폭력 유감”

외교부에 공식 입장 표명

중국 정부가 최근 서울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행사과정에서 일부 중국인들의 시위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달 30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허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날 방중 중인 이명준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경찰과 기자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위로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관련 된 중국 유학생들을 선처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공식입장을 밝혀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허 부장조리는 또 이번 서울 성화봉송 행사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순조롭게 치워진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앞서 이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오후 류충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과도 만나 이번 중국인 시위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재차 표명했다고 문 대변인은 덧붙였다.

중국인 폭력사태와 관련 자유청년연대와 북한인권국제재단 등 시민단체가 모인 '4·27 중국인폭력 피해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중국시위대 폭력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우씨 주한중국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복당 갈등’ 재점화

한나라 지도부 논의 유보

친박측 의원들 강력 반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전'이 또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정형근·김학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 문제를 정면 거론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논의를 유보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7월 전당대회 불출마, 일괄 복당' 카드를 꺼낸 지 5일 만이고, 지난달 29일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친이계 중심으로 평가되는 정 최고위원은 "친박 인사들의 탈당은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친박연대든 무소속이든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분열은 선별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도 "직전 당 대표였고, 유력한 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전대 출마까지 걸고 논의해 달라는데 최고위에서 묵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재섭 대표는 회의에서 "차기 당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며 "최고위원회가 복당 문제를 일도양단으로 끊듯이 결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 핵심 측근은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복당 문제를 계속 제기할 뜻을 확실히 했다. 때문에 당 지도부의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달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대표(오른쪽), 안상수 원내대표(가운데), 김학원 최고위원이 탈당한 친박(親朴) 인사들의 복당 여부를 논의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18대 국회서 처리” 국정책임장 “절대 안된다”

당정 추경예산 편성 갈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히 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을 넘어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정면충돌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의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내가 있는 동안엔 안 된다"며 원천 봉쇄하자 정부에서는 "18대 국회서 하겠다"고 맞받았다.

이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까지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말한 지 하루 만에 차관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했다"면서 "한나라당을 아주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아주 대담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내 상황도 이 정책위의장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미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당론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위의 독주를 막겠다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이를 놓고 정권에선 안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이 정책위의장을 힘으로 누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정책 현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서 비롯된 두 사람의 대립은 여권 핵심부의 '또 다른 파워게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경 무산 등의 과정에서 당과 정부에 대한 이한구 의장의 영향력이 커지는 조짐을 보이자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를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새로운 의원이 들어오니 충분히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양정례 15억원은 공천헌금”

모친 오늘 영장 청구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씨가 당에 빌려줬다는 '대여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직접 친박연대에 낸 특별당비 1억원 외에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건넨 15억5천만원에 강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김씨가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당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씨가 딸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당에 이익을 준 것으로 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친박 외곽단체 이모씨, 서청원 대표의 측근 손모씨와 접촉해 구체적 약속까지 들어가며 딸의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0만원씩 건넨 점이 공천의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많은 국민이 양 당선자가 공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될 만한 전국적 인지도,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하지만, 합법적 형태를 갖춘 대여금을 '공천 헌금'으로 규정해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전례가 없어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SONY BRAVIA

고객감사 大 축제

HDR-SR12

120 48

국제외식산업(주)

스카이워메 새문체 단정하셨습니다

스카이워메 OPEN

062-262-2278